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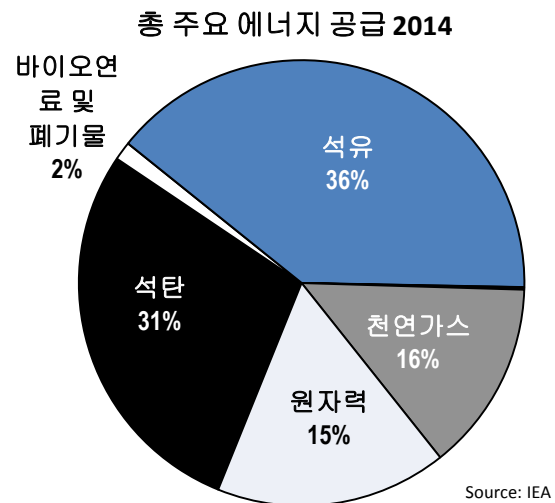
화석 연료 지원수단 목록: 한국

OECD 화석 연료 지원수단 목록(*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은 OECD 국가 및 6 개 대규모 파트너 경제(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연방 및 남아프리카)에서 화석 연료의 생산 또는 소비를 지원하는 직접 예산 지원 및 세금 지출을 식별, 기록 및 추산합니다.

에너지 자원 및 시장 구조

한국은 화석 연료 자원이 매우 적어서 석탄 공급 1%, 석유 1%, 천연 가스 1%를 제외한 전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수요의 17%만 자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원자력 포함).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액화 천연 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며, 석유의 경우 전세계 다섯 번째 수입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업체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연 가스, 전기 및 지역 난방 부문은 주로 공공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국영 한국석유공사(KNOC)는 한국의 전략적 석유 보유와 국내외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 및 탄광업은 주로 민영화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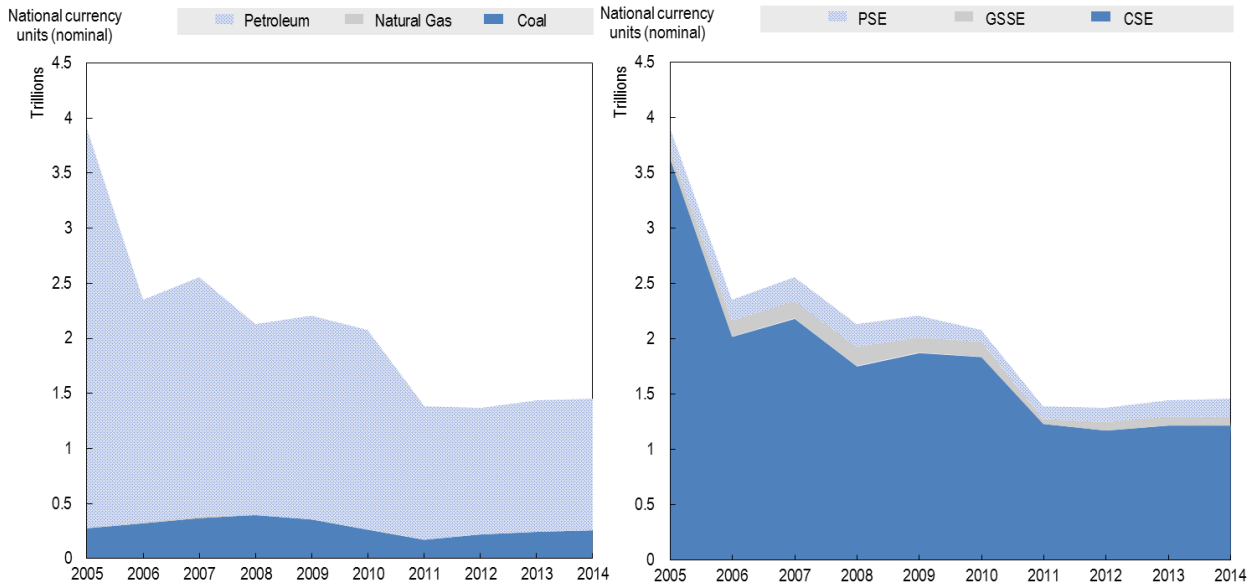
국가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한국가스공사(KOGAS)는 천연가스 수입, 운송 및 도매 공급을 독점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 사용을 위해 직접 수입할 수 있습니다. 소매 시장은 30 곳 이상의 도시 가스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와 도소매 시장의 경쟁에 대한 개방은 2016 년 6 월 관련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이행을 마련중이다. 한국은 매우 적은 양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의 대부분을 수입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와 한국의 민간 업체들은 현재 50 여 건의 해외 역청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휴광은 제외된 수치임)

한국의 전기 산업은 정부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수직 통합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국영 전력거래소(KPX)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KEPCO의 6 개 발전 계열사는 약 4/5의 용량을 관리하며, 독립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 풀에 판매하고 있는데 KEPCO가 이 전력 풀의 유일한 구매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5 개 발전 업체를 민영화하기로 한 계획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및 세금

한국에서 천연 가스 및 에너지 가격은 산업자원부(MOTIE)에서 직접 통제합니다. 전기 부문의 경우 전기 위원회(KOREC)에서 KPX 및 최종 전기 관세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도소매 가격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역청탄 가격은 규제를 받지 않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및 연탄의 도매 가격은 채산성이 낮은 광업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로 정부에 의해 설정됩니다.

한국에서 연료 유형별 화석 연료에 대한 총 지원(좌측) 및 지원 지표(우측)



참고: CSE=소비자 지원 추정치, PSE=생산자 지원 추정치, GSSE=일반 서비스 지원 추정치.

한국에서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의 모든 판매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10% VAT 세율 이외에 가정과 기업에 판매되는 석유 제품과 가스에 대하여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송용 연료에 대한 최종 소매 가격에는 교육세와 기타 다양한 유형의 교통세(소위, 교통, 에너지 및 환경세)가 포함됩니다.

최근 개발 및 지원 추세

한국에서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지원이 많은 이유는 농업 및 어업 부문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13 년 이러한 두 정책에 따른 금액이 한화 기준 총 약 1 조 2 천억원(미화 11 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광산업의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간 국내 석탄 생산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무연탄 채굴에 대한 지원은 시장 가격 지원, 자본 설비의 확보를 위한 보조금, 석탄 자원의 탐사를 위한 보조금 및 보다 일반적인 특성의 지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0 년 초반에 자본 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최근 10 여 년 동안은 지원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탄 생산 지원은 생산업체의 제조의 단위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와 생산업체의 화물 비용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2009 년 G-20 피츠버그 협약에 따라 중단되는 2020 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예시

역탄에 대한 VAT 면제 (1976-)

1976 년에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국내 역탄 판매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채탄 자본 및 설비 (1989-)

이 정책은 가격 지원, 자본 설비의 확보를 위한 보조금, 석탄 자원 탐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일반 지원을 통해 국내 무연탄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산이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11 년 수치에 따르면, 이 정책에 7 조 5 천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